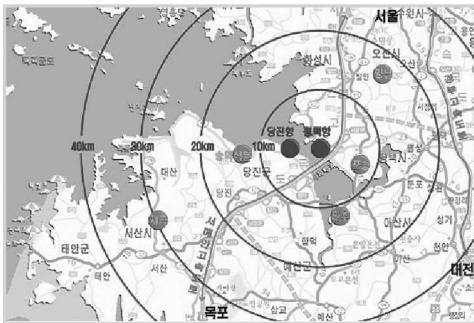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 재정경제부,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전북 새만금 3곳 추가지정 -



충남도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2월 21일 확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에 이어 21일 충남도에 또 하나 낭보가 들어왔다. 바로 충남도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충남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 경북, 전북 새만금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충남과 경기도 잇는 6814만㎡에 7조원 투입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규모는 충남도에서 당진의 석문지구와 아산의 인주지구, 서산의 지곡지구 등 3개 지구 4190만㎡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등 2624만㎡를 포함해 총 6814만㎡다.

이 중 5006만㎡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국비 475억원과 지방비 4139억원, 민자 6조 5382억원 등 6조 999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개발된다.

5개 지구별 개발 컨셉은 당진 송악·석문지구는 (송악)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석문) 친수공간의 생태도시 ▲아산 인주지구는 레저·휴양의 관광 및 자족도시 ▲서산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의 산업도시 ▲평택 포송지구는 첨단산업, 국제물류·업무, 주거복합도시 ▲화성 향남지구는 BT산업 글로벌 메카 등이다.

이에 대한 차별화 요소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적지로 개발(R&D, 물류, 입지경쟁력 강화) ▲외국인 정주환경(교육, 주거, 의료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 ▲동북아 부가가치물류 기능의 강화(수입 중국부품 + 국내첨단부품의 조립가공 → 수출기지화) ▲국제적 수준의 R&D기능 확충과 첨단생산 기지화를 통해 국가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이다.

고품격 주택단지 및 다양한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시설 마련



또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이 물류(항공, 항만)와 국제금융비즈니스 기능 중심인 데 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생산 기능을 특화시켜 기존 구역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시설과 교육의료시설, 관광 레저시설도 마련된다. 주거 시설로는 각 지구별로 장단기 체류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거 시설 및 자연 친화형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악단지는 업무주거형 주택 및 자연 지형을 활용한 저층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석문단지는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중저층의 블록형 주택과 별장형 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주 지구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과 수변공원 주변의 저층 저밀의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형태의 업무주거형 주택이 공존하도록 조성한다.

교육과 의료시설로는 외국인 주거단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복합된 외국인 학교를 송악과 석문, 인주 등 4곳에 설치하고 송악단지에 외국인 종합병원과 석문 지구에 전문 병원이 설치된다. 관광 시설로는 인주지구에 샅교호 및 기존 유원지와 연계해 18홀 골프장을 건설해 인근 태안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108홀 골프장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해 충남과 경기 양 지역간의 이권이 표출될 가능성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역 균형 발전 기대...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인프라 조성 및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로 전국적인 생산유발액은 총 54조 4330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유발액 18조 5810억원, 고용유발 효과 총 33만 5756명 등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지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유발액은 총 13조 328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3조 9420억원, 고용 창출효과도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했다.

충남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 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국방대 논산 유치와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외자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글은 디트뉴스24(2007년 12월 21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 맨손의 자원봉사자 50만명... 태안, 기적을 만든다
- 해상사고로 원유 1만2,000여톤 유출 '검은 재앙'
- 봉사자 계속 몰려... 외국인들 "한국 놀라워"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및 방제 일지

12월7일 오전 7시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정박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원유 유출 시작

오후 8시 기름띠 태안반도 해안 습격

8일 정부, 재난사태 선포

9일 오전7시30분 유조선 원유 유출 중단, 총 1만900톤(1만2,547㎏) 유출

11일 정부, 태안 등 6개 시·군 특별 재난지역 선포

16일 방제 자원봉사자 10만명 돌파

22일 방제 자원봉사자 30만명 돌파

24일 해경, 크레인선과 예인선 선장 등 2명 구속, 유조선 선장 계속 수사중

26일 방제 자원봉사자 40만명 돌파, 성금 110억원 돌파

29일 방제 자원봉사자 50만명 돌파 예상

12월 7일 이른 아침 충남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1만2,000여톤이 넘는 검은 기름은 순식간에 태안 해변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백사장이 시커멓게 변했고, 양식장의 굴과 전복은 모두 폐사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던 태안 주민들은 절망했다.

그러나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뀌었다. 매일 수만명씩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기름띠를 빠르게 걷어내며 태안의 속살을 되찾고 있다. 방제 작업 지원을 위해 온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손길이 태안의 해안을 닦고 또 닦았다. 버스 안에서 기말고사를 보면서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들도 있었다. 성탄절에도 방제복 차림의 인간띠는 이어졌고, 송년회 대신 태안으로 달려온 기업과 단체들도 많았다.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태안 자원봉사자는 사고 열흘만인 16일 연인원 10만 명을 돌파한 뒤 3,4일 간격으로 10만 명씩 증가, 보름 만인 22일 3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연말까지 50만명을 돌파할 것이고, 방제작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원봉사의 손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기름유출사고 직후 (위)
피해복구 후 (아래)

방제 자원봉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1997년 일본 후쿠이(福井)현 미쿠니(三國) 마을 앞바다 중유 유출 사고의 경우 석 달간 3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와 기름을 걷어냈다. 하지만 태안은 불과 보름 만에 30만 명 기록을 깼다.

태안반도가 사고 이전처럼 복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파도와 백사장은 제 색깔을 찾았고, 자취를 감췄던 고동과 게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청둥오리, 왜가리 등 철새도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다시 날아들기 시작했다.

‘태안의 기적’은 세계 기름방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그 주인공은 이름없는 자원봉사자들이다. 하지만 아직 삼폐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태안과 보령의 59개 섬은 이제서야 방제가 시작했다. 특히 무인도는 아직도 기름 범벅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유다.

인재로 드러난 원유 유출 사고의 교훈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초동대응 실패, 방제능력 재점검 및 매뉴얼 정비, 유치리제 유해 논란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피해어민들의 피해배상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방제가 성공해 내년 여름 해수욕장들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일했던 곳을 내년에 다시 찾아와 특별한 감회를 맛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자원봉사신청 (041) 670-2644~7

*이 글은 한국일보(2007년 12월 28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뚝뚝 뭉친 열정 ‘승리’ 일궈다*』

- 민·관합동 정부설득... 불가 → 이전 끌어내
923명 고용 효과·경제가치도 1371억 달해 -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방대 논산 이전 발표는 단순히 ‘기관이 옮겨간다’라는 명제를 뛰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도에는 각종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기업 본사가 등지를 틀었지만 기대감만 높았을 뿐 현재까지 지역과 동화되지 못한 채 하나의

‘섬’으로 표류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하지만, 국방대 논산 이전은 지역 민·관이 하나로 뚝뚝 뭉쳐 중앙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열정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국방대 이전은 2년 반 동안 행정도시와 논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 178개 기관 중 유일하게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국방대는 특히 천안, 아산,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천안, 아산은 정부가 인정한 성장지역으로 이미 명분을 잃었고 연기는 행정도시와 통합 논의 중이어서 부적절한 평가가 팽배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12월 12일자 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대는 논산 이전 불가 사유로 ▲교통 접근성 악화로 교육기능 차질 ▲1,100여 명에 이르는 외래교수 초빙 불가능 ▲학생수 감소 ▲해의 군사외교 인사 방문시 불편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완구 충남지사의 치밀함으로 민·관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근거와 논리를 꼼꼼히 찾아 균형발전위원장과 건교부 장관 등을 설득하는 한편, 이해가 부족하면 또다시 찾아가 보완 설명하는 등의 열정으로 마침내 국방대 논산이전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했다.

우선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면 각 군(軍) 본부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등과 함께 국방산업단지(66만㎡)로 엮어 대전의 자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를 클러스터화 할 수 있어 낙후된 충남 서남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3군 사관학교까지 유치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대 논산이전 결정은 기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효과도 지대하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국방대 논산 이전 효과로 일단 지방세 12억 2,000만 원이 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또 923명의 고용효과와 87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92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게 된다.

논산시도 시유지 6만 6,000㎡를 무상 제공하며 진입도로 건설, 문화·체육 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 2,000여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백제문화제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만든다

-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추진계획 보고회서 밝혀 -



충남도는 12월 5일 이완구 도지사 주재로 공주·부여 양 지역 시장·군수, 의장, 문화원장과 행사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백제문화제 집행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제54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제53회 백제문화제 공식 후원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공주대학교 이찬희 교수의 평가보고에 이어 한찬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기획관리처장의 백제문화제 결산과 내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찬희 공주대 교수는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73.5%가 매우 만족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그중 대 백제기마군단 퍼레이드와 백제향, 인절미 축제, 사비백제의 부활 등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년 백제문화제의 가시적 성과로는 관람객 126만 명(외국인 102천 명 포함)과 353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계획구상에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찬희 처장은 개최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간으로 늘려 추진할 계획이며, 주제도 '해상왕국 700년 대 백제'로 바꿔 관람객 15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존 프로그램인 '백제향'과 '대 백제 기마군단 퍼레이드'를 대폭 보완하여 추진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대의 불꽃놀이 쇼 ▲700m 백제성 쌓기 ▲대 백제 사신 행렬과 한·중·일 무령왕 대제 ▲5악사와 B-boy 댄스공연 ▲차전놀이 등 전통놀이 시·군 경연을 추진하여 관람객에게 흥미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지사는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이한 행사로는 관람객에게 깊이 있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내년 행사는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남들이 못하고 안 될 것 같은 행사를 찾아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보고된 행사 외에도 백제유물 되찾기 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백제문화제를 아시아 최고의 역사 문화축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금강환경대상 수상

- 전국최초 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 -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금강환경대상에 전국최초로 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 통합관리에 힘쓴 충청남도(수질관리과)가 선정됐다.

12월 4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강환경대상'을 받은 충청남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전국최초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의 우수한 공적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다원화된 물 관리체계에 따라 농림수산국 4과, 복지환경국 2과, 건설교통국 1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3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지난 5월 3일 전국최초로 '물 통합관리본부' 발족과 함께 물 통합관리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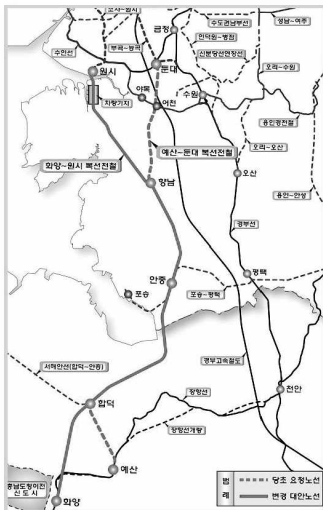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하천 등의 수질오염 특성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로 대안 제시 ▲각각 다른 부서 및 기관에서 관리하던 하천과 저수지 등의 수질

측정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3국 7과, 1연구원에서 개별 추진하던 물 관련 사업을 물 통합관리를 통해 4대 목표 42개 실천과제를 선정 '물 통합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물 통합관리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저수지 수질개선 시범연구사업 ▲물 관리 관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금강생태 탐사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상·하수도분야 국비확보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확정

— 총연장 90.18km 2017년 완공, 서해안 지역 발전 기폭제 —



충남도 홍성군 굽다면 화양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를 잇는 연장 90.18km(사업비 28,304억원)의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가 내년 9월 착수, 2017년 준공 목표로 건설된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 말부터 예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건설계획인 예산→야독의 경제성(B/C 0.65)이 낮게 산출됨에 따라 시·중점을 화양→원시로 변경하여 기며 약전교투 끝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을 어렵게 얻어냈다.

시·중점을 변경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정에서 충남도가 서해안 개발시대와 도청신도시건설, 당진지역 천강 산업의 부각 등을 내세우면서 철도건설의 당위성을 주장, 사업의 착수를 이끌어 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서해선 철도건설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익산에서 합류하여 장항선 홍성과 화양에서 분기, 이번에 신설되는 서해선(화양→원시)을 거쳐 원시와 소사를 경유, 정의선과 연결됨으로서 남북을 잇고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 중국엔 유럽과 연결까지도 예상된다.

낙후된 우리도의 서남, 서북부의 활성화와 신 도청 개발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충남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재 기반복선·노선단선 개량사업이 한창인 장항선의 복선전철화를 앞당기고, KTX 유행과 수도권 전철의 신도청소재지까지 연장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로드맵 최종 확정

- 향후 5년간 장애인복지발전에 4,350억원 투자 계획 마련 -

충남도는 11월 20일 이완구 도지사와 장애인단체장 및 기업인단체장,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연구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확정유보 하였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도는 이번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투자예산의 변경 확정(4,816억원→4,350억원), 비예산사업 적극 발굴 추진, 시·군과의 사업 계획 합의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5개년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5개 분야 66개 사업에 4,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분야 37개 사업에 3,948억원, ▲원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개선분야 9개 사업 129억원,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분야 10개 사업 193억원, ▲하나되는 통합교육 및 정보화 분야 6개 사업 44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신장 4개 사업 35억원을 투자 하게 된다.

이를 재원별로는 ▲국비 1,387억원, ▲도비 1,941억원, ▲시·군비 1,022억원으로 국비가 31.9% 로서 국비의존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2,000가구와 사회복지 전문가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외부연구진,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함은 물론, 이번 결과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 복지발전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민선4기 3년차 조직개편 '틀' 확정

- 純增 없이 자체조정으로 1과 3담당 신설, 10국 45과 193담당 -

충남도는 민선도정 3차년도의 도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했다.

금번 조직개편은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면서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정원 증원 없이 군살을 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필수 불가결한 복지,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보강하여 조직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기구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편한 것이 큰 특징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충족을 위한 노인장애인과 신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T/F팀 신설 ▲문화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시설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예술 분야 기능보강 ▲활력 있는 국제통상, 대외 농어업 (FTA대책) 분야 전문 인력 등을 중점 보강하여 '강한 충남' 실현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이로써 충남도의 조직은 10국 44과 190담당에서 1과 3담당이 증설되는 10국 45과 193담당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정원으로 조정하였고, 정원도 3,337명으로 단한명의 인력증원이 없는 민선4기 3차년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道에서는 입법예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08년 1월중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